

<통일시장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해소 특별행동> 주요 내용

(破除妨碍统一市场和公平竞争卡点堵点专项行动)

1. 발표 배경

- '전국 통일대시장 건설'은 중국 당국이 2022년 4월 '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가속화에 대한 의견'을 발표한 이래 당 중앙의 중대한 정책 결정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, 이후 매년 정부업무보고와 관련 후속 지침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음.
-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이 누적되어 온 가운데, 2024년 6월 「공정경쟁 심사조례」가 행정법규 형식으로 제정되면서 통일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을 규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.
 - 시행 첫해인 2024년 심사 정책 문건은 약 2만건, 문제 발견 비율은 2.1%로 제도 시행의 초기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, 여전히 정비 대상이 광범위함을 시사하고 있음.
-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(시장총국)은 2026년 5월 중순 전국 각급 시장감독기관에 특별행동을 하달 하였으며, 이번 베이징시 발표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특별행동이 수도 차원에서 이행된 사례임.

2. 주요 내용

(1) 제도적 기반 구축

- (사전·사후 공정경쟁 심사 전면화) 신규 정책 문건에 대한 사전 심사를 의무화해 지방 보호주의와 지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, 기존 정책 조치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통해 통일시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정·폐지함.
- (27개 부처 연석회의 및 감독 강화) 시장감독·발전개혁 등 27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시장 진입, 요소 취득, 입찰, 정부 조달 등 중저분야의 암묵적 장벽과 차별적 특혜를 엄격히 감시함.
- (베이징시 전역 표본조사 및 시정촉구) 시 산하 52개 행정기관과 각 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등 전방위 조사를 실시하고, 위반사항 발견시 시정촉구

공문을 발송해 기한내 정비를 독려함.

- (京津冀 시장 일체화 가속) 징진지(베이징·톈진·허베이) 지역이 공동 마련한 4대 분야 18개 통일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정책 조치에 대한 교차점검 및 결과 상호인정을 실시해 지역간 장벽을 제거함.

(2) 플랫폼 거버넌스 정비

- (반독점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제시) 《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문답 매뉴얼》을 편찬해 알고리즘 담합, 강제적 양자택일, 데이터 차단, 빅데이터를 이용한 차별적 가격 책정 등 10여개 고위험 행위를 명시함.
- (플랫폼 기업의 자율 시정 유도) 플랫폼 기업 대상 전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, 매뉴얼을 기준으로 기업이 스스로 경영 리스크를 점검·시정하도록 독려함.
- (4대 가격 레드라인 확정 및 이행점검)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가격개입, 수수료 불투명성, 가격 기만, 알고리즘을 악용한 가격차별을 4대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시정상황을 지속 추적함.
- (신용 제약을 통한 경쟁환경 최적화) 라이브커머스, 배달업 등 경쟁이 집중된 분야를 점검해 위반시 행정처벌 정보를 공시하고, 경영이상명부 등재 및 신용회복 심사기준을 강화해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함.

(3) 기업 보호를 위한 법집행 강화

- (반독점 집행강화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) 플랫폼 경제, 자연독점, 원료의약품 등 민감 분야의 독점협정 체결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도적 거래비용을 절감함.
- (화북 8개 성·구·시 기업결합 심사 수행) 시장총국의 위탁을 받아 화북 8개 성·구·시의 기업결합 간이사건 심사를 수행하며, 심사서비스를 고품질·고효율화 함.
- (AI 등 신산업 분야 부정경쟁 차단) 신산업 분야내 트래픽 탈취와 플랫폼 규정 악용 행위를 단속하고, AI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구축하는 한편, 행정법 집행과

형사사법 간 연계 메커니즘을 통해 다자간 협력 보호체계를 수립함.

- (해외 리스크 대응 및 보안체계 고도화) 해외 기밀유출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및 분쟁 신속대응 메커니즘을 완비하고, 디지털 증거보전과 기술적 권리확정을 유도해 기업의 기밀보호 체계를 지능형 방어체계로 격상함.